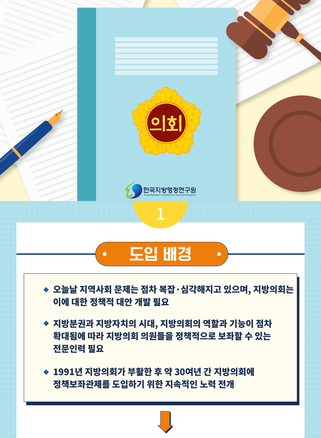
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란?

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1

도입 배경

- 오늘날 지역사회 문제는 점차 복잡·심각해지고 있으며,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개발 필요
-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,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
-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약 30여년 간 지방의회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

2021년 **지방자치법 전부개정**('22.1.13 시행)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**'정책지원관'**에 대한 도입 근거 마련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2

정책지원관의 역할과 규모

역할
- 의정자료 수집, 조사, 연구 및 지방의회 권한 관련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

직무
- 행정사무 감사(조사), 조례안 입안 및 검토, 예산 결산 심사
- 5분 발언 및 질의서 작성, 의정활동 언론홍보, 자료수집 및 분석, 공문서 작성 등

규모
-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)에 따라 ('22년) 의원 정수(3,865명)의 ¼ → ('23년) 의원 정수의 1/2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3

지방의회 지원인력 간 직무 비교

구분	정책지원관	개별보좌관	전문위원
채용	지방공무원 임용령 근거 하여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인사위원회 채용	의원 개별 채용	지방공무원 임용령 근거 하여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인사위원회 채용
소속	상임위 전문위원실/의회사무기구 등 조례로 자율 결정 (기구정원규정 제15조제5항)	해당 의원실 소속	상임위 전문위원실/의회사무기구 등 조례로 자율 결정 (기구정원규정 제15조제5항)
주요업무	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(시행령 제36조제1항)	정책지원 및 정무활동	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
직급	시도 : 6급 이하 시군구 : 7급 이하	보좌관: 4급 상당 선임비서관: 5급 상당 비서관: 6급·9급 상당	시도 : 4급, 5급 이하 시군구 : 5급, 6급 이하
신분 및 공무원 종류	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(기구 정원규정 제15조제5항, 제6항)	별정직 공무원	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가능
임용절차	지방공무원 임용령 *	의원 개별 채용	지방공무원 임용령 *

*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
일반임기제공무원: 제2·3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4

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1/2

01 부정채용의 수단으로 남·오용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
-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에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,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친인척(예: 4촌 이내 친인척) 채용 금지 조항, 채용절차 및 채용인력의 자격 정보에 대한 공개 조항, 채용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등을 명시

02 정책지원관의 개인비서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필요
- 사적인 업무의 범위 또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, 의원과 정책지원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
- 정책지원관이 사적인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 이를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로 보장
-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 지시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5

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2/2

03 정책지원관의 역량 함양을 위한 장치 필요
- 인턴십,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프로그램, 정책지원관들 간의 학습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책지원관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 마련

04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원의 지휘권 확보 및 역할 갈등 해소 방안 마련 필요
-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의원의 지휘권 약화 상황 및 다수의 의원들의 지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역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

05 지방의회 여건에 따른 자율적 운영 보장 필요
-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 제도의 큰 틀을 구상한 후에는, 지방의회가 처한 여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6

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

지방의회 전문성 강화
- 지방의회의 전문 역량 확보를 통해 주민대표 기능 향상

지방의회 견제기능 강화
-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시·견제 기능 활성화

정책 전문가 양성
- 의회정치 및 지방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대규모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작용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7

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향후 추진방향

- 「지방의회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」 등 지방의회 관련 연구 수행
- 행정안전부,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 개최
-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제시

김건여 연구위원 kgyeo@krila.re.kr 033-769-9850

한국지방행정연구원